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조사  
- '남북경협 재개' 의 목소리 높아

발행인 : 강인수  
편집주간 : 김동열  
편집위원 :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조사 - ‘남북경협 재개’의 목소리 높아

Executive Summary .....	i
1. 조사 개요 .....	1
2. 조사 결과 .....	2
3. 시사점 .....	9

## &lt; 요약 &gt;

## ■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 조사

(개요)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7월 6일부터 13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역점과제로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의 상당수(65.5%)는 '현수준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2014년 말에 비해 '좋아질 것'은 51.7%→19.5%로 급감한 반면, '현 수준 유지'(37.4%→65.5%)와 '나빠질 것'(11.0%→14.9%)은 증가하였다. 또한 전문가 10명중 약 9명(87.4%)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8.15 기념사에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통한 경협 확대를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 이산가족 상봉 등의 순으로 제안이 많았다.

**(전문가 통일의식) 성향 구분 없이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최근에 들어 1국가 2체제 방식의 소극적 통일 방식 선호, 통일비용 부담 의사 축소 등 통일의식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형태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조사결과에 비해 줄어든 반면(41.0%→31.0%), '1국가 2체제'(34.3%→43.7%)와 '자유 왕래 수준'(23.8%→25.3%)의 응답률은 증가했다.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3명중 2명(63.2%)이 찬성했다.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2013년 조사결과에 비해 부담액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연 10만원 이하 비율은 33.4% → 49.4%로 증가한 반면, 연 11만원 이상(연 11~50만원 + 연 51만원 이상) 비율은 66.7% → 50.6%로 감소하였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한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였으며, 한편으로 중국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국가로도 지목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과 도움을 줄 국가는 미국과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움을 줄 국가로 미국은 68.1%(2012) → 56.2%(2013) → 49.4%(2015)로 하락한 반면, 동기간 중에 중국은 18.8% → 38.5% → 42.5%로 상승했다.

**(시사점)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를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대박 실현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오늘의 통일준비가 더욱 중요하며, 남북경협 활성화가 그 해법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해 통일비용 저감에 보탬이 되므로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의 적극적 실천이 요구된다.

셋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의교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 1. 조사 개요

### ○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시기 : 2015년 7월 6일 ~ 7월 13일 (8일간)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7명
- 조사 내용 :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점 과제,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 통일비용 부담 의사,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등

#### <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①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li> <li>-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li> <li>- 8.15 기념사에서서의 대북 제안 필요성</li> <li>- 8.15 기념사에서서의 대북 제안 의제</li> </ul>
②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필요성</li> <li>- 통일의 편익</li> <li>- 통일의 형태</li> <li>- 통일 예상 시기</li> <li>-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li> <li>- 통일비용 부담 의사</li> </ul>
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국가</li> <li>- 통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국가</li> <li>-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국가</li> </ul>

## 2. 조사 결과

### ①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추진 과제

○ (전망)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는 현재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연말 전망치보다 긍정적 응답이 대폭 감소

- 전문가들의 상당수(65.5%)가 '현 수준 유지 정도'로 응답했으며, 지난 연말의 조사 결과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화

- 지난해 말 조사에 비해 '좋아질 것'(51.7% → 19.5%)은 급감한 반면, '현 수준 유지'(37.4% → 65.5%)와 '나빠질 것'(11.0% → 14.9%) 응답 비율은 증가
- 이는 UN 북한 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에 대한 북한의 반발, 6.15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기대 축소 등에 이어,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UFG)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
- 특히 보수보다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의 전망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남

남북관계 전망	2015년	2015년 하반기 전망			
	연간 전망	종합	성향별		
	2014.12		보수	중도	진보
좋아질 것이다	51.7%	19.5%	34.5%	14.3%	10.0%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37.4%	65.5%	62.1%	67.9%	66.7%
나빠질 것이다	11.0%	14.9%	3.4%	17.9%	23.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 12., 2015. 7.

○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응답

- 전문가들은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역 재개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경협사업의 복원과 활성화를 향후 정부의 역점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

- 그 다음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25.4%) 등의 사회문화 교류 부문을 지적했으며,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20.2%)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목함
- 부문별로는 경제(42.8%) 부문이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30.0%), 정치·군사(27.2%) 순으로 나타났음
- 성향별로는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부문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정치·군사적 부문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	37.0%	32.8%	32.1%	45.8%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	20.2%	20.7%	21.4%	18.6%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17.3%	13.8%	19.6%	18.6%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8.1%	10.3%	8.9%	5.1%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	5.8%	10.3%	5.4%	1.7%
새로운 남북경협 사업 제안	5.2%	5.2%	5.4%	5.1%
사회문화 교류 확대	4.6%	1.7%	7.1%	5.1%
북한 인권 문제 개선	1.2%	3.4%	0.0%	0.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 마련	0.6%	1.7%	0.0%	0.0%

○ (8.15 기념사에서서의 대북 제안 필요성) 전문가 10명중 약 9명(87.4%)은 정부가 8.15 기념사에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이는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야 함을 시사함

8.15 기념사에서서의 대북 제안 필요성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필요하다	59.8%	51.7%	64.3%	63.3%
다소 필요하다	27.6%	37.9%	17.9%	26.7%
보통	3.4%	3.4%	3.6%	3.3%
별 필요 없다	6.9%	6.9%	7.1%	6.7%
전혀 필요 없다	2.3%	0.0%	7.1%	0.0%

- (8.15 기념사에서서의 대북 제안 의제) 전문가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기념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공동행사와 대북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에 대한 제안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DMZ 평화음악회 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제 부문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및 기존의 남북경협 복원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북철도 연결식과 개성공단 2단계 착공식 순으로 나타났음
  -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개최, 특사 파견 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호 비방 중단과 기존 정상합의 등에 대한 존중 표명도 제안
  -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DMZ 공동행사 개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의 제안 내용이 많았음

	주요 제안 내용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활성화</li> <li>- 남북철도 연결식, 개성공단 제2단계 착공식</li> <li>- 대규모 SOC 개발 확대,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활용</li> <li>- 북한지하자원 공동투자개발, 백두-개성 관광 등</li> </ul>
정치·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li> <li>- 상호 비방 중단(대북 전단 살포 일시 중단 등)</li> <li>- 남북정상 합의 존중(6.15 및 10.4 정상선언 이행) 표명 등</li> </u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DMZ 공동행사(평화음악회, 공동 조사) 등</li> <li>- 인도주의 : 취약계층 지원 확대(영유아 지원, 결핵퇴치 등)</li> <li>- 체육 : 경평축구대회 등 남북공동체육대회,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개최</li> <li>- 학술 : 부문별 남북 청소년 공동학술회의 및 역사 유적지 공동 발굴 등</li> <li>- 문화·예술 : 공동 영화 제작, 예술인 상호 방문 등</li> <li>- 기타 : 지자체와 NGO(민간단체) 교류 확대, 민생 인프라와 주민 보건 개선, 산림녹화 사업 등</li> </ul>

주 : 음영의 굵은 고딕체는 각 부문별로 제안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②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식

○ (통일의 필요성)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최근에는 미미하나마 그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감소하였음
- 이는 통일대박 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100.0%)들이 보수 성향(96.6%)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통일의 필요성	2013.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필요하다	98.1%	97.7%	96.6%	96.4%	100.0%
필요없다	0.0%	0.0%	0.0%	0.0%	0.0%
모르겠다	1.9%	2.3%	3.4%	3.6%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3. 11., 2015. 7.

○ (통일 편익)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 편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통일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절대 다수(97.7)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

통일 편익	2011.11	2013.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도움이 된다	96.3%	98.1%	97.7%	100.0%	92.9%	100.0%
손해가 된다	3.8%	1.0%	1.1%	0.0%	3.6%	0.0%
모르겠다	0.0%	1.0%	1.1%	0.0%	3.6%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 11., 2013. 11., 2015. 7.

○ (통일의 형태) 전문가들은 '완전한 통일'(31.0%)보다는 '1국가 2체제의 평화 공존'(43.7%)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가운데 '완전한 통일' 비중은 줄어든 반면, '1국가 2체제 평화공존'과 '자유로운 왕래 수준'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결과보다 증가
- 이는 전문가들의 통일관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극적·현실적 통일 방안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됨

통일 형태	2011.11	2013.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남북한 완전한 통일	27.8%	41.0%	31.0%	31.0%	32.1%	30.0%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43.0%	34.3%	43.7%	44.8%	39.3%	46.7%
자유로운 왕래 수준	27.8%	23.8%	25.3%	24.1%	28.6%	23.3%
현 상태도 괜찮다	1.3%	1.0%	0.0%	0.0%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게서

○ (통일 예상 시기)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통일이 11년이 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과반수(59.8%)는 11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6~10년 소요(31.0%) 순으로 나타남
-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통일 예상 시기를 짧게 보고 있음

통일 예상 시기	2011.11	2013.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5년 이내	6.3%	5.7%	4.6%	10.3%	0.0%	3.3%
6~10년	29.1%	23.8%	31.0%	44.8%	21.4%	26.7%
11년 이상	63.3%	68.6%	59.8%	37.9%	75.0%	66.7%
불가능하다	1.3%	1.9%	4.6%	6.9%	3.6%	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게서.

○ (통일세 신설)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통일세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 전문가 3명 중 약 2명(63.2%)은 통일세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음
-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진보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통일세 신설	2011.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찬성한다	54.3%	63.2%	75.9%	60.7%	53.3%
반대한다	45.7%	31.0%	20.7%	32.1%	40.0%
모르겠다	0.0%	5.7%	3.4%	7.1%	6.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 11., 2015. 7.

○ (통일비용 부담 의사) 전문가들의 과반수(50.6%)는 연간 2~50만원을 부담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부담액 크기는 2013년 조사 결과에 비해 축소

- 2013년 결과에 비해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는 비율이 감소
-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연 10만원 이하 비율은 증가한 반면(2013년 33.4% → 2015년 7월 49.4%), 연 11만원 이상(연 11~50만원 + 연 51만원 이상) 비율은 감소하였음(66.7% → 50.6%)

통일비용 부담 의사	2011.11	2013.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부담하고 싶지 않다	10.1%	2.9%	5.7%	6.9%	7.1%	3.3%
연 1만원 이하	13.9%	2.9%	11.5%	20.7%	3.6%	10.0%
연 2~10만원 이하	32.9%	27.6%	32.2%	31.0%	35.7%	30.0%
연 11~50만원 이하	36.7%	42.9%	34.5%	24.1%	42.8%	36.6%
연 51만원 이상	6.4%	23.8%	16.1%	17.2%	10.7%	2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 11., 2013. 11., 2015. 7.

③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 (통일 영향력)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 같은 나라로는 미국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라고 답함

- 미국(63.2%)과 중국(3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없었음

○ (통일 호감도) 한반도 통일 영향에 대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꾸준히 상승

- 전문가들은 미국을 한반도 통일에 여전히 가장 많은 도움을 줄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호감도 하락 : 2012년 68.1% → 2015년 49.4% (18.7p 하락)

· 비호감도 상승 : 2012년 11.3% → 2015년 25.3% (14.0p 상승)

-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국가로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도 지목

· 호감도 상승 : 2012년 18.8% → 2015년 42.5% (23.7p 상승)

· 비호감도 하락 : 2012년 69.0% → 2015년 44.8% (24.2p 하락)

- 한편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크게 증가 (2012년 19.7% → 2013년 27.6%)

· 이는 최근 한일 간 독도 분쟁과 과거사 왜곡 등 외교적 갈등의 영향으로 해석

통일 호감도		2012.10	2013.11	2015. 7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가장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국가	미국	68.1%	56.2%	49.4%	55.2%	53.6%	40.0%
	중국	18.8%	38.5%	42.5%	41.4%	32.1%	56.3%
	일본	1.4%	0.0%	0.0%	0.0%	0.0%	0.0%
	러시아	11.6%	5.3%	8.0%	3.4%	14.3%	6.7%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국가	미국	11.3%	28.0%	25.3%	3.4%	32.1%	40.0%
	중국	69.0%	55.0%	44.8%	58.6%	42.9%	33.3%
	일본	19.7%	17.0%	27.6%	31.0%	25.0%	26.7%
	러시아	0.0%	0.0%	2.3%	6.9%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 11., 2013. 11., 2015. 7.

### 3. 시사점

#### ○ 첫째, 8.15 광복 70주년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마련의 기회로 활용

-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10명 중 9명(87.4%)은 8.15 경축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것을 주문
- 특히 8.15 경축사에서 금강산관광과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역 재개 등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 제안을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 이산가족 상봉 등의 순으로 제안

#### ○ 둘째, 통일대박 실현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오늘의 통일준비가 더욱 중요하며, 남북경협 활성화가 그 해법이라는 인식이 필요

- 전문가들은 성향 구분 없이 통일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최근 들어 통일비용 부담 의사 축소, 완전한 통일보다는 1국가 2체제의 소극적 통일 형태 등 통일의식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임
-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색 국면의 장기화와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임금 갈등 등의 불안정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남북경협 활성화 등 비정치 분야가 최적의 해법으로 생각됨
-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희생 지원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해 통일비용 저감에 보탬이 되므로,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 ○ 셋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함

- 남북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 이해시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야 함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02-2072-6221, sjhong@hri.co.kr)

최성근 연구위원 (02-2072-6223, csk01@hri.co.kr)